월/요/광/장

이 병 화

‘광주과학기술특구’ 왜 필요한가

“광주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호남권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약 4년 반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첨단과학단지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특구로 지정하여 영어 좀 쓰게 한다고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가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과학비즈니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대선주자는 과학신도시 건설보다는 광주와 대구 등 기존의 과학도시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유력 대선주자들이 과학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광주와 대구 등이 투쟁해온 결과물이다. 우리 광주는 지난 4년 반 동안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와 줄기차게 싸워 왔다. 구체적 사례가 대구광역시와의 공동 보조다.

필자는 2003년 초, 우리나라의 산업이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덕·대구·광주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내륙거점도시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에게 보내 양 도시간의 정책공조를 제안했다. 이후 양 도시는 국토연구원에 공동용역을 의뢰하고 연구를 진행해가면서 광주 및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광주와 대구출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중간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영호남 협력은 일회성 행사나 구호에 그쳤지만 기술특구에 대한 정책공조는 최초의 실질적인 협력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와 대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충청권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정책만을 고수해 왔다. 광주와 대구의 과학기술특구는 다음 정부에서나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사회는 다시 한번 광주과학기술특구 지정에 대해 지역의 입장을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학기술특구로 지정받는 것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다.

필자의 대답은 아직도 ‘그렇다’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필수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특구인가 하는 문제다. 그간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주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지원에 집중되어 지역간 경합이 극심했다. 그러나 특구는 이러한 정부예산의 지원보다 일부 예외적인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 및 기술이 자유롭게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하는데 걸림돌이 돼온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교육 및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를 막는 현행 국내제도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세계적 명문 교육기관을 유치할 경우 조기유학으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광주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특구 지정에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광주와 대구 이외에도 포항과 강릉 등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도시를 특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교육기반은 단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확충할 수 없으므로 교육시설이 발달된 교육도시여야 한다. 둘째, 도시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하므로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권역 내에 입지한 모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인력 및 시설이 임계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권역별로 하나씩만 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광주와 대구가 가장 유력한 과학기술특구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대경제학과 교수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여수엑스포 유치에 국력 총결집해야

18일 파리에서 개막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이번 총회는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 27일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무대다. 이번 총회에서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는 2012 박람회 후보도시인 여수와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대해 지난 4~5월 벌인 BIE 실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3개국의 프리젠테이션을 받는다. 개최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행사다. 유럽 선진국들은 실사결과와 프리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지지도시를 결정하는 경향이다.

BIE 실사결과 여수는 ‘준비상황이 탁월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이같은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단은 ‘여수 프로젝트’ 등 ‘히든 카드’를 꺼내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하지만 경쟁국도 만만치 않다. 모로코는 국제적 휴양도시 탕헤르의 명성에 ‘아프리카·이슬람권 최초’를 명분으로 유치전을 벌이며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는 98개 BIE 회원국중 가장 많은 36개 유럽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고 표몰이를 하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불리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생산유발효과가 10조원대에 이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치전은 이제부터 사실상 ‘시작’이나 다름없다. 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외교력과 기업의 지원 등 국력을 총결집해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지역기업 노조 ‘정치파업’ 결의 명분없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기아차 광주공장이 조만간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광주·전남 산업계가 ‘하투(夏鬪)’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한편 산별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에 따라 26일부터 3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캐리어 광주공장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현대삼호중공업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도 조만간 ‘하투’에 나설 조짐이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이번 지역 기업들의 ‘하투’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이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무분별한 투쟁임을 지적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하투’를 강행하겠다는 이들 노조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하투’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한미 FTA 비준반대라는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절차상 하자도 제기되고 있다. 명백히 명분 없는 불법투쟁인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금호타이어 및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태도다. 한미 FTA 체결 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이 자동차 및 관련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들 노조의 ‘하투’는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기업의 명분 없는 ‘하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파업이 온당한 처사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민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행동으로 저지에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오 현 철

배심재판 도입에 즈음하여

올해 6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민이 형사재판의 주체가 되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재판의 도입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사상 가장 놀랍고도 획기적인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법(司法)의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재판 제도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배심재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은 완성된 제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시범제도로 도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배심재판의 득(得)보다 실(失)이 큰 것으로 판명되면 위 제도는 사장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배심재판의 폐해를 예방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지난해 여름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형사법정의 배심재판을 참관한 적이 있다.

모리스라는 피고인이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2급 폭행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므로 이에 맞서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당시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배심원 선정 과정이었다.

20명에서 25명의 배심원 후보를 소집하여 판사·검사·변호인이 돌아가며 1~2시간 동안 신문한 후 이 가운데 2~3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다 보니 14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데 꼬박 이틀이 소요되었다.

2급 폭행사건에 소집된 배심원 후보는 100명이 넘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의 성향, 그 성향을 이용한 소송기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배심원의 성향 또는 소송기술에 따라 사건 실체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제도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같은 재판을 보고 필자는 소송기술이 실체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배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 사법에서의 국민주권과 실체진실 발견이 조화를 이루는 배심재판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김 찬 호

한우 지키기도 좋지만 너무 비싸다

〈이글은 본보 13일자 기고란에 실린 농협전남지역본부 축산경제팀 차장 한대웅씨의 ‘한우, 불고기와 같이 지키자!’에 대한 반론입니다〉

어렸을 때 쇠고기는 집안에 손님이 방문하신다거나 제사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명절 때나 맛보던 귀한 음식이었다. 이후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쇠고기 값은 비싸기만 하다.

축산기술이 발달하고 유통 시스템이 80년대보다 훨씬 더 발달했는데 왜 지금도 쇠고기 값이 비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부위별로 다르겠지만 주먹만한 고기량을 1인분이라며 2만 5천원~3만원이라고 하니 식당에 들어섰다가도 겨우 2인분을 시켜먹고 식사로 배를 채우는 게 현실이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한우로 푸짐한 외식을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네 살림살이와 동떨어진 이야기다.

1년에 한우쇠고기로 외식을 한 횟수가 열 번이나 될까 싶을 정도다.

왜 이렇게 한우 쇠고기 값이 비쌀까? 그 이유를 대부분 국내 한우 쇠고기 시장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서 찾는다. 지난 1일 한 언론에서 축산농가가 480만원에 판 소 한 마리는 도축자를 거쳐 도매시장에 가면 560만원이 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10%인 80만원을 도매상인이 가져가게 되고, 도매육이 다시 판매점에 가면 800만원되니, 30%인 240만원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챙겨간다는 것이다. 이러니 쇠고기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한우 쇠고기를 식탁에 마음껏 올리고 싶다. ‘한우, 불고기와 같이 지키자’라는 글에서 ‘불고기 영양’, ‘상추와 싸먹으면 섬유질과 비타민C가 공급된다’고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을 담보한다고 했다. 한우가 좋다는 것, 한국인이면 다 안다. 하지만 쇠고기 먹다가 가계살림 망칠 수는 없지 않는가?

농협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FTA가 타결되어 한우산업이 흔들린다고 주장하면서 개방시대에 한우가 살아남는 길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우가 살아남으려면 현재의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쇠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축산농가의 어깨에 힘 실어 주자고 홍보만 하지 말자. 개방화 시대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건강과 어려운 가계살림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축산산업의 비효율적이고 적정하지 못한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신토불이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마지막으로 한우 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한우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면서 그 책임을 축산업자에게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 유통구조의 개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5·18 기념재단 국제협력팀장〉

無 等 鼓

위장전입

대통령을 바라보는 연륜에 이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개발시대인 70, 80년대를 청장년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획일화된 군사독재에, 사회 전반이 확대·팽창 일로를 걷던 시절,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국의 대통령 반열에 오르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 생애를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여론조사 1위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69년 이후 이사를 24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온 이 전 시장이 직접 나서 아이들의 초·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위장전입으로 공직에 기용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국회 인준이 부결된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였다. 장상 서리는 “(위장전입은) 시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장대환 서리는 “자식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일어난 일로 ‘맹모삼천지교’로 이해해 달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이 전 시장의 해명은 장대환 서리의 그것과 레퍼토리가 같다.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상 서리 청문회에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이명박 선대위 인터넷위원장이다.

비단 장상, 장대환 서리 뿐인가. 참여정부 들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낙마했고, 김병준 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숱한 각료가 위장전입으로 인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수십년 전의 위장전입을 문제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던 위장전입이란 형태의 탈법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자, ‘혼자’ 또는 자신의 주위만을 생각하는 독단이 분명하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씁쓸하다. /오주승기자 jsoh@kwangju.co.kr

보험약관 전문용어 어려워… 쉽게 고쳐야

보험약관 중 의학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전문용어들로 가득차 있다.

전암병소·경계성종양·추상·추간판탈출증 등 어려운 의학용어들 투성이가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이용 및 가입약관을 살펴봐도 너무 길거나 깨알 같은 글씨가 많아 의도적으로 약관읽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험사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험회사 상담원들조차 잘 모르는 용어를 가입자들이 알아서 읽으라는 것인가. 쉬운 우리말로 써도 될것을 굳이 보험회사들이 어렵 게 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지금도 많은 보험회사 약관들이 소비자 인내심을 시험하며 약관 읽기를 포기, 상품 구입이나 회원가입에 동의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보험약관의 전문 의학용어들은 우리 말로 쉽게 바꾸어 가입자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산업기능요원, 농기계 수리점에도 근무케 했으면

6년 넘게 사용한 트랙터로 최근 감자 캔 밭에서 작업을 하다 축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밭에 세워뒀다.

크레인을 불러서 트럭에 실고 가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읍내 수리기사를 마을까지 부르는 것도 출장비를 지불해야 했다.

마냥 세워둘 수 없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크레인 대여 등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3~4일내로 찾아온다던 수리센터 직원은 고장난 지 11일째야 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따졌더니 6년이나 지난 기계라 부품 구하는데 7일 걸렸다고 했다. 또 요즘 농번기라 고장으로 들어오는 농기계가 많은데도 수리 기술자가 없어 혼자 하다보니 늦었다며 미안하다는 것이다.

모내기도 끝냈고 바쁜 일을 대충 마무리한 뒤라 다행이지 싶었다.

농기계 수리센터는 월급도 적고 힘들어서 구직자들이 기피한다고 한다.

산업기능요원을 도시에만 배치할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전국 농기계 수리점에 근무케 하면 어떨까.

▲이종언·곡성군 석곡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